

# 윤석열 체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작

의정단상

이명노

광주시의원



대한민국의 역사가 또 한 줄 쓰였다. 드디어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소처에 체포됐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에 이루어진 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석열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검찰과 공소처로부터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며 장외 여론전을 펼쳤다. 결국 공소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며 경찰의 지원을 받아 체포를 시도했고, 대치 끝에 체포에 성공했다. 윤은 유혈사태를 막기 위함이라는 끝까지 치졸한 명분까지 세워가며 지지분한 말로를 보였다.

잘못 뽑은 대통령의 지난 2년 7개월의 임기를 돌아보며 사실은 꽤 여러 부분에서 암시가 존재했음을, 우리가 더 빨리 행동해야 했음을 통탄한다. 국민의 입을 막고 끌어내는 것을 보며,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를 봉쇄할 줄은 왜 몰랐을까. 측근과 무속만을 믿는 것을 확신하고도, 무속인을 요직에 기용할 것이라 상상을 왜 못했을까. 사람 하나 잘못 뽑아서 얼마나 많은 국민을 잃고 시간을 낭비했는가. 이제 바로잡고 그 잃은 모든 것들의 가치를 청산해야 한다. 이 마음을 잊지

않도록 단상을 적어본다.

먼저, 지금부터 쓰여지는 역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과정이 될 것이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 인사들을 체포하고 구금하려 한 인물이 처벌을 받는 판례가 생기는 계기이다. 이러한 행위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걸 정의할 수 있는 기회이다. 그렇기에 헌법재판소는 더욱더 객관적인 논리에 입각한 명쾌한 판결을 해내야 한다.

또한 이번 사태를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 미국 독립을 이끈 토머스 제퍼슨은 “자유라는 나무는 때때로 애국자와 독재자의 피로 새롭게 해야 한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경계와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앞으로 진짜 피를 기대해야 되겠는가. 민주주의는 국민의 주권을 바탕으로 한 정치 체제이며, 법치주의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통치하는 체제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 독재와 폭정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역사의 뼈에 시국이라는 칼로 새겨두고 늘 인지해야 한다.

더 나아가 윤석열의 내란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잠재적 취약점을 확인한 사례로도 기억될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무장병력 동원, 국회 봉쇄 등의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이다. 이러한 일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것은, 독재 권력이 얼마나 쉽게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시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다. “윤석열은 총을 든 다섯 살짜리 아이”라는 명태군의 말처럼 부족한 성품을 가지고 법을 다루는 자들이 모이면 얼마든지 법 위에서 군림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줬다. 이제 국회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방법을 동원해 방어선 구축과 재발 방지 법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 차디찬 아스팔트 바닥에서 국민이 노력했고 바통은 이제 정치 지도자들에게 넘겨졌다.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며 상처를 어루만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상식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정권 창출의 그림도 신속하고 선명하게 그려내야 한다.

2025년 1월 15일 10시 33분 마지막까지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을 보고 체포되는 행위를 보며, 자신에게 소중한 무언가가 있는 만큼 국민에게도 소중한 가족과 삶이 있음을 무시한 채 국정을 운영한 그에게 더 큰 환멸을 느낀다. 환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자신과 이해관계자를 위한 국정운영을 하는 정부에 증오를 느꼈다면, 이제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을 할 정부를 세워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기로에 서있다. 지금 이 순간을 기점으로 민주주의와 정의의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언젠가 새로운 독재자가 빈자리를 노릴 것이다. 아직 응원봉을 내리기에 이르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더 정의로운 나라가 돼야 한다.

## 社說

### 통합 통한 ‘큰 목포, 큰 신안’의 꿈 응원한다

#### 신뢰 바탕으로 큰 그림 그려야

새해 들어 목포시와 신안군의 자율적 통합 논의가 활발하다. 지난 15일에는 목포시와 신안군이 공동으로 추진했던 목포·신안 통합 효과분석 공동연구용역이 마무리됐다. 행정 통합은 비용절감과 함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빠른 길이다. 협력과 신뢰로 목포와 신안의 통합이 가시화되길 기대한다.

통합효과 분석 연구 결과 목포시와 신안군이 통합될 경우 행정부문에서만 편익이 97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생산유발과 부가가치 유발 등 경제적 효과도 1조 9656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지난 2022년 888만 7000명이던 관광객도 오는 2027년 2200만명으로 늘어나고 관광객 증가로 인한 직접 지출 효과도 3조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인구도 26만여 명으로 증가한다. 규모의 경제를 떠나 이 같은 성과가 취업과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경우 ‘큰 목포, 큰 신안’의 꿈이 결코 꿈이 아닌 셈이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은 당장 발등의 불이다. 주민이 없는 자치단체가 존재할 의미도 없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규모를 늘리는 것은 행정뿐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효율적이다. 당장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022년 인구 10만명 이내 시·군을 통·폐합하는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인구가 늘어나면 더 낮은 비용으로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고 기업 유치나 출산율, 지역의 지속가능성도 한층 높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과거 여수시와 여천시·군의 통합이나, 순천·승주의 통합 사례에서 보듯 행정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크다.

지역의 미래를 위한 통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다. 규모의 지방 시대는 지방소멸과 저출산 등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대안이기 때문이다. 목포시와 신안군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통합을 위한 큰 그림을 짜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보다 상대의 필요를 먼저 배려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목포와 신안의 통합은 양 지자체의 문제를 넘어 전남 서남권의 발전을 이끄는 동력이다.

###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되길

#### 광주 최초 장례시설 영업 허가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광주 최초로 반려동물 장례 시설이 영업에 들어갔다. 15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애완동물 장례업체 A사는 지난 3일 동물 장묘업 허가를 받아 정식营业을 시작했다.

인허가 기관인 광산구는 A사가 설치한 동물 화장장과 납골당, 동물 장례식장 등 3개 시설의 적법성을 검토해 영업 허가를 내렸다. 대기배출시설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A사는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해 용도변경 허가를 광산구에 신청했으나 주민 반발 등의 이유로 부결됐다. A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광산구 역시 항소를 포기하면서 허가로 이어졌다.

현재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시대’를 맞고 있다. 반려동물 가구 수 급증과 동시에 반려동물의 사후 처리에 관한 관심도 높아졌다. 우리나라에서 사망한 반려동물을 조치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총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버려질 수 있고, 두 번째는 의료 폐기물과 함께 소각될 수 있다. 세 번째는 국가 정부에서 허가받은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이용해 반려동물의 사후에 대해 조치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자신의 집 화단이나 뒷동산에 매장한다거나 또는 선산에 매장하기 일쑤다. 정부가 환경법상 정한 세가지 기준 외의 사망한 동물을 함부로 매장하는 것은 불법이다.

현대인들의 생활패턴이 변화하면서 혼자 사는 가구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 외로움을 해소하고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생명의 순리인 죽음도 그만큼 늘어났다. 하지만 인간보다 존재가 작다는 이유로 반려동물의 사후는 쓰레기 봉투나 의료 폐기물로 처리되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국내의 반려동물 장례 문화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가까운 일처럼 반려동물 장례문화가 정착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겠지만 반려동물의 마지막 배웅이 사회적 문제가 아닌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 문화 확산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국민 고별 연설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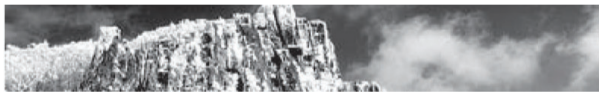
AP/뉴시스

#### 서석대

“모바일 인터넷의 진정한 모델로 만들고 싶다.” 지난 2010년 3월, 김범수 전 NHN 대표가 벤처기업 아이위랩을 설립하고 아이폰용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출시했다. 아이폰 사용자를 위한 채팅 서비스였다. 스마트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당시, 무료 메신저 앱은 그야말로 전성기였다. 와이파이가 연결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다 텍스트는 물론이고 음성과 사진, 동영상까지 채팅창에서 전송하는 뛰어난 기능 때문이었다. 해외에서 개발돼 무료로 제공되던 ‘왓스앱’부터 ‘엠앤톡’과 ‘햇살’, ‘카카오톡’까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했다.

그중에서도 카카오톡의 성장은 놀라웠다. 그 해 4명의 직원으로 시작한 카카오톡은 출시 1년만에 가입자가 1000만 명으로 늘어나는데 이어 2년만에 4200만 명을 돌파했다. 2014년에는 1억 3000만 명을 넘어섰다. 지금은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지난해 3분기 평균 월간 활성 사용자도 5419만 명으로 집계됐다. 한국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카카오톡으로 페이스북과 트위터에도 도전하고 모바일인터넷전화보이스톡도 ‘카톡’이 만든 성과다. 플랫폼과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등에서 올린 지난해 3분기 매출도 1조 9210억 원에 이른다.

모바일 메신저의 도약은 정보 전달 중심의 인터넷 환경



을 소통의 장으로 바꾼 혁신의 성과다. 저렴한 비용으로 전 세계 어디라도 누구나 연결할 수 있는 SNS는 모바일 인터넷이 가져온 혁명이었다.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던 정보 전달의 지배적 패러다임을 다원주의로 바꿨다는 의미도 크다. 자기중심, 단절, 독단, 획일성 등이 지배하던 전통의 미디어는 SNS가 확장되면서 다양한 가치관과 행동 등을 인정하는 포용의 사회로 변화했다. 신뢰와 상호존중, 개방성 등도 SNS의 가치다.

최근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막겠다고 카카오톡 등을 검열하겠다고 나서면서 국민들의 반발이 크다. ‘복합식 독재’,

‘카톡 계엄령’이라는 조롱도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말처럼 ‘카톡은 가짜뉴스의 성역’이었던 안된다. 가짜뉴스에 기생해 국가를 어지럽히는 행위도 사라지는 게 옳다. 그렇다고 국민의 생각마저 감시하겠다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불법은 법대로 처벌하면 된다.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도 전체주의적 사고다. 실제 처벌이 가능할지도 논란이다. 사람과 세상을 연결해 준 ‘카톡’. 혁신으로 이뤄낸 국민 애프터 소름 끼치는 디지털 전체주의로 통제하겠다는 오만한 민주당의 행태가 한심하다.

이용한 논설실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